

인도 정부 인스턴트 커피 국내기준(SNI) 내년 1월부터 도입

인도네시아 산업부가 내년 1월부터 인스턴트커피의 국내기준(SNI) 취득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고 현지 언론은 6일 보도했다.

산업부는 “소비자 보호 및 국내의 커피원두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산업부 음료·담배산업과의 파이즈 과장은 “고품질의 인스턴트커피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동시에 저품질의 수입품 유입이 계속되고 있다”며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인스턴트커피를 대상으로 SNI를 도입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부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커피 수입량은 2010년 5,000 톤에서 지난해에는 1만 5,307톤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대부분 커피는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커피를 포함한 커피 가공품의 지난해 생산량은 10년 대비 22% 증가한 22만 2,905톤이었으며, 시장 규모는 3% 증가한 9조4,086억 루피아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당초 인스턴트커피에 대한 SNI 도입을 올해 7월로 예정한 바 있었다. 로스팅된 커피에 부과하는 수입관세는 지난 7월 23일에 관세당국의 세율 개정에 따라 기존의 5%에서 20%로 인상됐다.

(출처 : 자카르타경제일보 2015/10/08)

□ 시사점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제품의 규격과 생산 과정에 관한 국가 표준 인증제도(SNI)를 운영하고 있음. 2010년 인니-중국 FTA 체결 이후 중국산 저가제품이 인니 시장에 범람함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을 앞두고 2014년 국가규격인증(SNI) 강제 품목 리스트에 66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힘. 신규 추가 품목으로 식품, 음료, 전자, 섬유 및 섬유가공품 등이 포함되어 있음.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수출업체 및 현지 바이어 및 유통업체들도 이러한 규제정책을 인지하여 즉각 대응해야 할 것임.